

강기정의원 '남상태 로비 몸통설' 발언 정치권 일파만파

與 “망나니 같은 발언” 초강경 대응 野 “도 넘은 靑… 검찰이냐 사법부냐”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으로비의혹에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관련됐다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 주장 이후 여야가 들끓고 있다.

한나라당은 '저열한' '시정잡배' '망나니' 등 원색적인 단어를 동원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파민 반응' '반민주' 등의 용어를 써가며 맞대응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편으로 강 의원 발언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며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저열한 발언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원만한 여야관계와 정치복원을 위해 야당의 다소 무리한 행동도 대부분 참고 넘어왔는데 이 문제만큼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면책특권은 부당한 권리과 힘에 저항하고 만든 것이다. 강 의원처럼 시정잡배보다 못한 허위 날조로 국가원수를 모독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고 전제한 뒤 "이런 국회의원 뽑아준 지역구민들도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며 다음 선거에서 이런 못난 의원을 반드시 퇴출시켜야만 민주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강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런 망나니 같은 발언을 하고 들어오는데 제1야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일어나 격려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이게 국회의원이 하는 서글픔을 느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국회의원 무책임 발언 용납 안돼”

김총리 “면책특권 보완 필요”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으로비의혹에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관련됐다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 발언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김활식 국무총리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면책특

정임원 원내 공보부대표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더무니없는 의혹으로 정국을 흔들어 놓고 자신들을 희생양으로 포장, 악당 탄압으로 불고 가겠다는 민주당을 보면, 과연 10년 수권여당의 경험을 가진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소설 같은 의혹을 확산하는 야당의원의 저열한 수법을 비판과 경제라고 강변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생각할수록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작 강 의원이 질문할 때에는 조용히 듣고 있던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발끈하며 과민반응하는 것은 국회를 무

시하는 처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검찰이냐, 사법부냐. 어떻게 국회 의원의 본회의 질문에 '구속감'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민주주의제도 발전과 더불어 보장된 역사적 산물로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계 각국의 현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 의원의 보편적 특권이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언행을 삼가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민주당은 반민주 반인권적인 도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연히 대응해 나가겠

다는 점을 국민 앞에 염숙히 약속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지도부나 의원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강 의원 발언의 민감성을 감안한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강 의원이 영부인을 지목하고 비의혹 정황까지 세세하게 말한 것은 다소 앞서나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닐 경우 본인은 물론 당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강기정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남북관계 해소위해 정상회담 필요” “FTA 재협상·수정은 있을 수 없다”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2일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통일세가 도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활식 국무총리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재협상을 풀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대화와 책임 있는 고위급 회담, 즉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민주당 의원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과 관련,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근로자들의 피해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간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 담보상태에 있는 피해자 보상 문제 해결, 일본이 보관중인 미불임금 공탁금 명부, 후생연금 및 우편저금 기록 등을 조속히 넘겨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에게도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면 적어도 국내와 같은 수준의 당원협의회를 해외에도 둬야 한다"며 재외국민의 교육권 및 참정권 보장과 재외국민의 정당 활동 및 투표에 질의 시간을 할애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4대강 반대 투쟁 강화

특위내 ‘비리 게이트 겸증 소위’ 구성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저지 투쟁'의 수위를 높일 태세다.

민주당 '4대강 대운하 반대특위'는 2일 국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 이인영 최고위원, 이미경, 유선호, 최인기, 김재윤 의원 등 1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반대 결의를 다졌다.

또한, 입찰단합 의혹 등 4대강 공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케이트'로 규정하고 특위내에 '4대강 비리 게이트 겸증 진상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당 일각에서 제기된 '4대강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다른 야당과 공동기구를 만들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 FTA대책특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당내 여러 의견이 병존함을 감안, 입장문을 하나로 정리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한 보고서를 3일 최고위에 제출키로 했다.

보고서에는 '주가 양보를 위한 밀실협상에는 반대한다'는 기본적인 입장과 함께 ▲ 전면 재협상 ▲ 불리한 요소만 바꾸는 조건부 재협상 ▲ 재협상 반대 등 세 줄기의 의견이 각각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원별장주택

전남 보성 전원별장 주택 대지 350 건35 단층슬라브 창고30평 교통좋고 조용하고 가격저렴 즉시 입주가 몽땅 1억 주인직

“신축” 매매·임대 (원룸·투룸)

원하시는 물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약에서 이전까지)

부동산 미분양

광주의 강남!
봉선동 더설아파트
25% 파격 할인!
최대 1억 2천만원 할인!

고층 대률 물건 최다 보유!
44py 54py 65py

공동증개 문의환영!!

봉선동 더설아파트 전문 공인중개사무소

제석공인증개사
분양문의 062) 673-3100

조선이공대학 2010년 유망 신선품과 프랜차이즈 서비스 창업과

우리과 특징 5가지

- 창업실패의 85%는 1년 이하의 준비기간
- 2년 간의 실무적인 창업준비로 100% 사업성공
- 20~30대 장사·사업으로 10억 모은 점장·대표 특강
- 창업스쿨, 알짜상권분석, 커피바리스타등 실무중심 수업
- 월수익 1000만원 이상 업소의 성공요인 분석

졸업후 직원 > 매니저 > 점장 > 창업까지

학과카페: NAVER 카페 bxbx

재학중 5가지 자격증취득 (100%)

외식산업관리사 서비스경영관리사 커피바리스타 유통경영관리사 고객서비스수료증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을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 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062) 228-0990, 010-8494-9484

문의 011-837-3140
TEL. 062-369-0347
010-8625-3328 / 010-5050-8145